
**TBS 조례폐지안 철회와
지역공영방송특위 설치 촉구 기자회견**
- 공영미디어 사유화와 재벌헌납 기도 중단하라!

일시 : 2022년 8월 2일(화) 10:30

장소 : 언론노조 회의실

전국언론노동조합 ·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

진행순서

1. 개회 및 참석자 소개
2.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 조정훈 TBS지부장 인사말
3. 지역공영방송특위 설치 제안 주요 내용 설명
4. 회견문 발표(배포 자료 대체)
5. 질의응답
6. 폐회

지역공영방송특위 설치 제안 주요 내용

1.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 공영방송에 대한 몰이해

[연합뉴스] 일문일답, 오세훈 “TBS 기능 쇠퇴…교통정보 무슨 의미있나”, 2022.06.03

시장이 해야 할 일은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다. 우선 대체로 TBS에 대해 너무 정치적이고 편향적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 아무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좌파적 이념을 가진 분들도 동의할 것이다. 특정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방송 전체를 놓고 말하는 거다.

둘째, TBS는 별도 재단으로 자립했으니 거기에 걸맞은 원칙을 스스로 세우고 예산으로도 자립해야 한다. 무리하게 당장 하라고 안 한다. 적어도 5개년, 3개년 이런 식으로 예산 자립을 위한 자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 셋째, TBS 기능이 쇠퇴했다는 것에 국민이 다 동의한다. 자율주행차에 탑승하고 상용화도 되는 판에 교통정보를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러한 세 가지 원칙을 갖고 임하면 된다. 저는 구체적인 지침을 줄 생각이 없고 특정 프로그램을 문제 삼을 생각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방통위도 반대할 이유가 있겠는가. 사실 이런 것들은 TBS가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다. 그것이 사리에 맞는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TBS가 주체적으로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

[KBS] 최영일의 시사본부, 2022.07.22. 김현기(서울시의회 의장)

▶ 김현기 : 한마디로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교통방송이 수명을 다 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그로 인한 교통방송 청취 수요의 감소. 이제는 교통방송을 듣고 시민들이 운전하는 분 거의 없습니다. 내비와 또 각종 이런 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해서 운전을 하는데 명칭이 교통방송이지 사실 교통방송의 본연의 역할은 끝났고 기능도 끝났다. 더 이상 이런 방송에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은 낭비적 요인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발의를 하게 됐고 두 번째는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시민의 한결 같은 요구사항이 교통방송은 이제 문을 닫아라, 문을 닫도록 해라. 이게 시민의 요구였습니다. 절대적 요구였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이번에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 최영일 : TBS 노조 입장 이거 하나만 더 여쭙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죠. 지역 공영방송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 대화 의사를 밝힌 것 같아요. 폐지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합의점이나 절충안 가능성이 있을까요?

▶ 김현기 : 방금 질문하신 노조와의 절충안은 현재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생각하지 않고 있다?

▶ 김현기 : 이유는 간단합니다.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 통과. 강경하십니까.

▶ 김현기 : 조례를 발의한 이상은 우선 협상과 타협을 하기 위한 그런 수순이 아니고요. 교통방송이 목적과 목표를 달성했고 그 수명을 다 했으니 서울시민의 요구를, 뜻을 받들어서 이 조례를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YTN] Issue & People, 2022.07.19. 최호정(TBS조례 폐지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저희가 이번에 선거 과정을 통해서 서울 시민들께서 교통방송을 어떻게 다시 잘 생각해 보라는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세금을 가지고서 굳이 이렇게 논란이 될 시사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게 맞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탄압 이런 게 아니라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논의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희 시의원들은 95.1 이거 없애고 싶거나 그런 마음 없습니다. 진짜 이 소중한 주파수, 우리 서울시민이 원하는 방송, 다 좋아할 수 있는 방송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뜻이라고 봐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 세 가지 원칙(공정, 자립 재정, 방송기능 변화)으로 TBS가 주체적으로 방향을 논의하라는 시장, 교통방송의 무용론과 시민의 요구라는 두 근거로 일방적인 조례 폐지안 통과를 선언한 시의회 의장, (TBS를) 없애려는 의도가 아니라 서울시민이 원하고 다 좋아할 수 있는 방송으로 만들어 보자는 뜻이라는 조례안 대표 발의자의 주장 등 국민의힘에서는 통일된 입장이 없음.
- 특히 김현기 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특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 절차 및 공론화 과정을 주도하고 시민사회와 TBS구성원의 목소리를 경청할 의무가 있음에도 “조례 통과”라는 목표를 정해 놓고 형식적인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론함. 같은 인터뷰에서 김 의장은 조희연 교육감의 공교육 정상화에 반대하며 학력 저하 대책을 위한 여야 합동 특별위원회 설치 결의안을 언급. 언론노조가 제안한 ‘공영방송 특별위원회’를 절충안이라며 단호하게 거부한 것과 비교되는 정치적 행보.
- 시장, 서울시의회 의장, 대표발의자 모두 서울지역 공영방송은 서울시 홍보 방송을 해야 한다는 구시대적 발상에 머무르고 있음. 지역 공영방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기 아니라 약 44조 원(2022년 기준)에 이르는 예산 의결권이 자신들에게 있으며, 따라서 출자·출연기관인 TBS의 예산 지원을 폐지할 권한만을 주장하는 것.

- 그러나 어떤 시의원도 TBS의 공적 기능에 대해 언급하지 못함. 이는 아래와 같이 재단 전환 이후에도 매체 중심의 예산 편성 관행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

편성본부	세부사업
전략기획실	미디어 정책 기획 및 대외 협력
	콘텐츠 편성 및 평가
	매체 홍보 및 시민협력 추진
	방송자료 관리
라디오제작본부	FM 방송제작 및 운영
	eFM 방송제작 및 운영
TV제작본부	TV 방송제작 및 운영
보도본부	보도방송 제작
	재난정보 운영관리
방송기술본부	송신소 유지관리
	방송장비 유지관리
	정보화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경영지원본부	청사유지관리
	광고 유치 추진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기본경비

- 매체별, 부서별 예산 편성은 TBS가 서울시 사업소 시기 항목과 유사함. 이에 따라 시의회에서는 TV(PP)와 같은 매체의 시청률 성과를 지적하며 예산 효율성을 따지고, TBS 내부에서는 각 부서별 예산 변동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구조.
- TBS 예산은 TBS가 수행해야 할 공적책무의 이행과제를 명시하고 과제 수행에 적합한 매체별 예산 운용 권한은 이사회가 맡는 것이 타당함. 공적책무와 이행과제 중심의 예산 편성은 이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TBS 평가 제도를 운용하는데에도 적합함.

2. 미디어재단TBS의 공적 책무 제안

- TBS 조례 제3조(재단의 사업)에 명시된 7개의 사업을 재단의 공적 책무로 개정하고 제12조(예산 편성 및 결산)의 매 회계년도 경영평가를 공적 책무 평가로 변경.
- TBS의 공적 책무는 TBS 조례 제1조(목적)에 명시된 “시민의 동등한 정보 접근의 보장,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 문화예술 진흥”에 기초하여 미디어 콘텐츠, 시민참여 미디어 서비스, 보편적 미디어 환경 구축, 미디어 산업 발전 방안 분야 등으로 나누어 제시. 아래와 같은 지역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이행과제를 예시로 들 수 있음.

공적 책무 분야	공적책무 예시	이행과제 예시
미디어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민주주의 활성화 ■ 서울·수도권 균형 발전 ■ 교육 기본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보도 및 시사교양 콘텐츠 강화 - 지역 경제 및 균형 발전을 위한 보도 콘텐츠 강화 - 전 연령·지역 대상의 보편적 교육 콘텐츠 강화
시민참여 미디어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참여 편성 보도 제작 ■ 시민 공동체 활성화 ■ 시민권 보장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미디어와의 공동 기획, 편성, 제작 콘텐츠 확대 -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지원 - 서울과 수도권 거주 외국인의 동등한 정보 접근 보장
보편적 미디어 환경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소수자의 접근권 보장 ■ 미디어 플랫폼 다양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콘텐츠 접근환경 개선 - 디지털·모바일 플랫폼 확대를 위한 서비스 개선
미디어 산업 발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 산업 공정거래 의무 ■ 미디어 노동권 보장 ■ 지역 중소 미디어 육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제작사·중소방송 등과의 공정거래 준수 - 미디어 불안정 노동 개선을 위한 제도 및 지원 방안 마련

- 공적 책무는 서울시 의회에서 TBS 조례에 반영하고 새로운 책무가 필요할 때는 공영방송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 공적 책무에 따른 TBS의 이행과제는 매년 TBS 이사회가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제출.

- TBS 경영평가는 지역 공영방송에 대한 시민의 평가가 우선되어야 하며, 세입-세출의 효율성이 기준이 될 수 없음. 공적 책무 - 이행 과제에 대한 연례 평가를 도입하여 그 결과를 이행과제 수립과 예산에 반영

3. 공영방송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 현재 안건으로 접수된 「TBS조례 폐지조례안」의 타당성에서 이상 제안한 TBS의 공적책무와 이행과제 수립 방안, 예산 편성 방식 변경까지 포함하여 폭넓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 의회 산하 ‘공영방송 특별위원회’(이하 공영방송 특위) 구성을 제안.
-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특별위원회)에 따른 여야 합의를 공영방송 특위 구성.
- 공영방송 특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위해 서울시의회 추천, 서울지역 소재 시민사회단체 추천, 미디어 관련 학계 추천 등으로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여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제47조(전문가의 활용)에 따른 자문단 10명 이내로 구성.
- 현재 서울시의회 문광위에서 논의 중인 「TBS조례 폐지조례안」 관련 공청회 및 토론회는 공영방송 특위 주체로 이관하여 서울시민의 참여를 폭넓게 보장해야 함.

기자회견문

공영미디어의 주인은 시민이다, 국민의힘은 TBS조례폐지안 철회하고 지역공영방송특위 설치하라!

지지율 20%대로 이른바 ‘취임덕’을 겪고 있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채 남탓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 정권 탓, 편향된 공영방송과 언론환경 탓, 이를 장악한 언론노조 탓. 인사, 채용, 방역, 민생, 분열을 둘러싼 국정 난맥은 본인들이 만들어놓고 누구도 책임지는 이 없다. 심지어 여당 지도부 일부는 ‘이대로 밀고 나가면 연말에 지지율이 오를 것’이라는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다.

이럴 때 만만한 것인 공영방송인가? 이미 3년 전에 교통방송 꼬리표를 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근거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해외 사례를 왜곡해가며 국가기간공영방송 KBS의 수신료 제도를 대폭 손보겠다고 한다. 심지어 과거 자신들이 국가 권력을 동원해 장악과 유린의 깊은 상처를 남긴 MBC가 ‘사실상 민영’이라고 억지를 편다. 이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TBS는 서울시 재원을 끊어 민영화하고, MBC는 방문진 지분을 팔아 민영화할 수 있으며, KBS 역시 단기적으로는 분리징수, 장기적으로 수신료 폐지를 통해 민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십 년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언론환경을 만들기 위해 분투해 온 언론노조는 이러한 민영화 시나리오의 최대 걸림돌이니, 당연히 말살해야 할 적으로 간주하고 연일 억지 공세를 펼치고 있다. 기가 찰 노릇이다.

13년 전 재벌언론에 방송을 허용해 대한민국 미디어 환경을 싹대밭으로 만들어놓고 이제는 공공미디어의 마지막 보루인 공영방송을 사유화(민영화)하자는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 알다시피 공영미디어 사유화의 최대 수혜자는 또다시 ‘재벌’이 될 것이고 민영미디어들에 대한 규제완화를 동반할 것이다. 이 흐름에서 손쉬운 표적이 된 공영미디어가 바로 TBS다. 서울시의 행정권력과 의회권력 모두를 획득한 국민의힘 입장에서 TBS조례 폐지안은 가장 수월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커다란 착각이다. TBS는 시장의 말 한마디, 의회의 절차적 승인만으로 만들어진 미디어기관이 아니다.

지난 2020년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출범하기까지는 수많은 주체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 왜 서울에 ‘지역공영’미디어가 필요한지, 시민들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어떻게

증진할지, 마을 단위 미디어와 어떤 플랫폼으로 활용될지 등을 놓고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사회, 언론인들이 토론을 벌였다. 새 출발 3년 차 TBS에 어떤 한계와 문제가 있는지를 제대로 짚지 않은 ‘숨통 끊기’는 지난 논의를 무위로 돌리는 역사적 퇴행이나 마찬가지다. 비슷한 규모 방송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방송을 꾸려온 구성원들의 땀을 배신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TBS에 반드시 필요한 논의는 3년 차 TBS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와 자리매김 방향을 모색하는 일이다. 아울러 공적 재원 조달의 연속성 담보, 상업광고 허용 등 규제 변화, 지역공영미디어로서의 법률적 근거 등 TBS를 둘러싼 제도적, 구조적 취약성과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재원 문제 등 구조적 취약성은 시민사회의 비판처럼 TBS 내부 구성원들이 ‘뉴스공장’같은 킬러 콘텐츠의 상업적 성취에 안주하고 의존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 물론 그러한 상황이 ‘뉴스공장’에 대한 여러 비판의 답이 될 수 없음을 TBS지부 구성원들 또한 잘 알고 있다. 권력 개입과 뉴스공장 가운데 무엇이 더 해롭냐며, TBS 콘텐츠에 대한 시민들의 정당한 비판을 양비론의 한 축으로 몰고가는 것은 부적절하며, TBS가 직면한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다. TBS는 거대양당 사이의 편협한 균형을 넘어 시민들이 제기해 온 저널리즘, 인권, 평등, 지역의 가치에 과연 제대로 부응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답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TBS 미래를 위한 제대로 된 논의가 전개되길 희망한다.

공영미디어인 TBS의 저널리즘과 역할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적 논의에 부처 점검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사회적 논의 대신 개원 직후 조례폐지안 발의를 단행했다. 설립조례안은 시가 발의했는데 의회가 폐지안을 제출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 즉각적인 재정 지원 중단이 무리라는 비판, 민생 위기 앞에 서울시의회가 다룰 우선 법안으로 적절한지 여부 등의 의견이 뒤따르자 대표 발의 의원은 ‘TBS 조례 폐지 처리가 목적이 아니라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 사태에 기름을 붓고 있는 이는 바로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다. 아무리 특정 정당 소속이고 자기 정치 지향이 있다지만 의장이라면 민주적 논의와 여야 합의 처리를 촉진해야 한다. 그런데 김현기 의장은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TBS조례 폐지안의 올 정기회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아직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는데 의장이 특정 조례안 처리에 힘을 실은 것이다. 오세훈 시장의 청부 입법(조례제정)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치적으로 조율하고 사회통합적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시의회의 역할이다.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가게에 맘에 드는 물건 없다고 다짜고짜 문 닫으라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일방행정이자 정치적 폭력, 생존권 유린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TBS지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TBS조례폐지안을 즉각 철회하고 사회적 논의를 위한 ‘지역공영방송특위’를 설치하라!
- >>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상임위 논의에 앞선 조례폐지안 관련 월권 행위 중단하라!
- >>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공영미디어 사유화와 재벌헌납 기도를 중단하라!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적지 않은 책임이 있는 언론노동자들 역시 저널리즘의 책임 구현, 시민 커뮤니케이션 권리 보장을 위한 내부 혁신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방송 편성과 보도, 제작의 자유를 갖는다. 이 자유는 진실을 전달하고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높이는 데 책임 있게 쓰여야 한다.”

- TBS 방송강령 중

2022년 8월 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